

‘조 단위’ 배상금 예상... 홍콩ELS ‘자율배상’ 난항

기본배상 비율 국민·농협은행 40%...신한·하나은행 등 20~30%대 금융권, 배임 혐의 검토...배상비율 따라 법적다툼 장기화 가능성도

금융감독원(금감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의 ‘분쟁조정 기준안’ (기준안)을 지난 11일 발표한 가운데, 금융권이 자율배상에 대한 법률 검토에 나섰다. 하지만 대다수 은행에서 기본 배상 비율이 20~4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면서, 사실상 기준안을 기반으로 한 분쟁조정 절차 및 자율배상 과정에서 금융권과 투자자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홍콩 H지수 ELS의 주요 판매사인 은행들의 기본배상 비율은 20~40% 선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11일 금감원은 기본배상 비율을 설명의무 위반 및 적합성의 원칙, 불완전판매 여부 등에 따라 23~50% 수준이라고 밝혔다.

기준안에 따르면 가장 많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20~60% 손실배상비율 구간에서 배상한다고 가정하면 각 은행들은 최소 1조5000억원, 많게는 4조6000억원 수준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권이 기존 금감원의 예상보다 낮은 기본배상 비율을 책정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우선 배상액 산출에 나선 은행들은 자신들이 판매한 홍콩 H지수 ELS 전체를 배상 대상으로 가

정하고 배상액을 산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은행들은 사후관리 전담팀(TFT)을 두고 손실이 확정된 건에 대한 예상 배상액을 산출할 계획이다. TFT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할 당시 녹취본을 정리하고, 배상비율 및 금액을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업계는 홍콩 H지수 ELS 주요 판매사인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의 기본배상 비율은 40%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11개 판매사 중 가장 높은 배상비율로, 신한은행·하나은행·SC제일은행 등은 20~30%대로 배상비율이 비교적 낮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배상비율이 높은 은행들은 판매사가 투자자의 상황이 맞는 상품을 권유해야 하는 적합성의 원칙 위반과 불완전판매 유발에 따른 배상비율 가중치

10%p가 추가되면서 은행별 배상비율이 갈린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SC제일은행 등은 적합성의 원칙에서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고 설명의무 위반, 내부통제 등을 합산해 20~30% 수준의 배상 비율이 나올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기존 예상됐던 배상비율보다 판매사의 배상비율이 낮다는 점과 자율배상 과정에서 사실상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금감원은 기준안을 발표하면서 원활한 배상을 통해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투자자와 판매사 양측 간 적화의를 통한 자율배상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법률 검토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배상비율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특히 각 은행들의 법률 검토에서 배상문제가 배임 혐의화(化) 될 가능성을 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배상은 판매사 측의 잘못 인정을 기반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배임 소송으로 이어질 시 자율배상 방식이 더 큰 문제로 번지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측 간 이해관계 및 배상비율에 따라 법적 다툼이 장기화 될 가능성도 있다.

은행들은 우선 다음달 시작되는 대표사례 분쟁조정위원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기준안 자체가 손실배상비율 측정에 있어 판매사 측에 유리하다며 오는 15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NH농협은행 전남본부 ‘전남교육사랑카드’ 장학기금 14억원 전달

학생·교직원 복진증진에 사용

NH농협은행 전남본부(본부장 정재현)는 12일 전남도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전남교육사랑카드’ 장학기금 14억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날 전달식에는 김대중 전남도교육감과 박종탁 농협중앙회 전남본부장, 정재현 NH농협은행 전남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전남교육사랑카드는 전남도교육청, NH농협, BC카드사가 협약을 맺어 발행한 법인·개인카드이며, 이날 전달한 장학기금은 지난 1년 간 전남도교육청을 포함한 각급기관(학교) 및 전남 교육가족들이 사용한 전남교육사랑카드 이용액의 일부를 적립해 조성됐다.

전달된 기금은 학생복지 증진사업 지원 및 교직원의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전남본부는 지난 2005년부터 올해 전달한 기금을 포함해 19년간 총 138억7500만원의 전남교육사랑카드 장학기금을 전달했다.

정재현 본부장은 “매년 전남 학생들과 교직원



의 복진증진에 보탬이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전남교육이 추구하는 지역 중심 미래교육을 현실화 하여 미래 인재를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또 교육청과 협력해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병역 이행’ 청년도 도약계좌 가입 가능해진다

장병 급여만 있어도 개설 가능

‘청년도약계좌’ 가입 문호가 병역을 이행 중이거나 이행한 청년들에게까지 확대된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소득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병역 이행 청년들은 비과세소득인 군 장병 급여만 있어 기간 계좌 개설이 어려웠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1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는 “향후 국방의 의무를 다한 병역이행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직전(또는 전전년도) 과세 기간에 군 장병 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이달 중 개정하고 병무청과 필요한 전산 연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정책 민생 토론회에서 논의된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 방안과 관련한 후속 조치도

이어나간다.

가입을 위한 가구소득 요건을 기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서 ‘중위소득의 250% 이하’로 낮춰 보다 많은 청년에게 중장기 자산 형성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 경우 1인 가구소득 상한선이 약 4200만원에서 약 5834만원으로 상향된다.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은 3월 가입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중도해지 시 지원도 강화된다.

긴급한 유동성 발생 가능성이 큰 청년의 생애주거 특성 고려해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최대 월 1만 4400원)으로 지급하도록 추진한다.

4월 가입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5월 5일까지 받는다. 이후 가입요건, 일시납입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국농어촌공사, 선임대 후매도 사업으로 청년농 농지 지원

15명 선정...최장 30년 장기 임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농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선임대-후매도사업’ 대상자 15명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선임대-후매도사업’은 농어촌공사가 청년농이 희망하는 농지를 매입한 뒤, 최장 30년까지 조건부 장기 임대하고 원리금 상환이 마무리되면 소유권을 이전해 청년농의 영농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남본부는 지난달 접수기간을 두고, 사업 신청자 중 농지 취득 이력과 소유 농지가 없는 청년농, 소유 농지 0.5ha 이내 청년 창업농과 20~30세대를 기준으로 총 15명을 사업 대상자로 선정했다.

전남본부는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농들의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해 총 2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영호 전남본부 본부장은 “청년농이 농업을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농지 관련 문제인 만큼, 초기 자본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농의 안

정적인 영농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을 희망하는 지역 청년농을 위해 다양한 농지은행사업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본부는 농업을 희망하지만 이번엔 신청하지 못한 청년농들을 대상으로 오는 5월에 2억원 규모로 추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관련 문의는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또는 대표번호 1577-7770을 통해 상담 가능하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기업 43% “가장 큰 부담은 ‘중대재해처벌법’”

경총, 기업규제 전망 조사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 10곳 중 4곳가량은 올해 가장 부담이 되는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24년 기업규제 전망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 기업의 43.3%(복수 응답)는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를 지목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월 전국 30인 이상 515개 기업을 대상으로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이뤄졌다. 이어 응답 기업의 35.5%는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규제도 ‘주52시간제 등 근로 시간 규제’를 꼽았

고, 21.0%는 ‘최저임금제도’라고 답했다.

또 응답 기업들은 지난 4년간 21대 국회의 규제혁신 실행도를 평가하며 100점 만점에 54.6점을 줬다.

경총이 지난해 전국 4년제 대학 경제·경영·행정 학과 교수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 중 64.5%가 국회 입법 활동이 ‘기업 규제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한 것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전체의 48.0%는 오는 5월 개원하는 22대 국회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노동 규제’를 들었다.

그다음으로 세제(29.7%), 안전 및 환경 규제(26.0%), 경제형별(17.9%) 순으로 나타났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아느냐/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